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2023. 3

목 차

I. 투자 활성화 촉진

1. 법인세 인하	1
2.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확대	2
3.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3
4.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4
5.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6
6.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9
7.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	11
8. 탄소중립 R&D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13
9.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제도 개선	15
10.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17
11. 공장자동화물품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 연장	19
1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21

II. 기업승계제도 개선

1. 상속세율 인하	25
2.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26
3.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27
4.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29
5.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31
6.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32
7.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폐지	33

I. 투자 활성화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단일화 추세¹⁾
 - 지난 10년간 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21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
 - * 최고세율('11년→'21년, % 지방세 포함): OECD평균 25.3 → 22.9, G7평균 32.8 → 26.7, 한국 24.2 → 27.5(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조세수첩)
 - 법인세 과세기 33개국이 단일 과표구간을 적용하고 네덜란드·프랑스는 2개 구간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포르투갈은 4개 구간 적용
- 한국의 법인세는 '18년부터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고 '23년부터 최고세율 24%를 부과하고 있어 글로벌 조세 트렌드에 역행
 - ※ 2022년 개정세법('22.12.23 국회 통과)에 따라 일부 완화(과표구간 별 1%씩 인하, 최고세율 24%)되었으나 기업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
- 법인세 부담 증가는 해외직접투자 증가를 유발하는 등 자본유출을 초래
 - * 해외직접투자(기재부) : '17년 450.2억 달러 → '21년 758.7억달러(308.5억달러 증가)
-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추진*, 탄소국경세 부과 등 각국의 조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켜 국제경쟁력 약화 초래 우려
 - * OECD는 137개국 동의를 얻어 글로벌 법인세 하한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21.7, OECD)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독려 필요

□ 건의내용

-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1) KERI, “글로벌 흐름에 맞는 법인세율 인하, 과표구간 축소 필요”, '20.9.2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이 비과세·공제·감면 등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제도 운용 중
 - * 최저한세 적용세율: 중소기업 7%, 중견(1~3년차) 8%, 중견(4~5년차) 9%, 일반(과표 1백억원 이하) 10%, 일반(과표 1천억원 이하) 12%, 일반(과표 1천억원 초과) 17%
 -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등
- R&D·통합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제도로 인해 세액공제 효과는 반감
 -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 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등 R&D 및 시설투자 등 세제지원을 확대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제지원 확대 효과가 제한적
 - 특히 중소기업은 R&D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로 100% 세제지원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중견·대기업은 최저한세로 인해 R&D 세액공제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 배제되는 세액은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나, 이월 공제액 또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세제지원 효과 감소 초래

□ 건의내용

-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제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9조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차등 운영 중

<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현황(%) >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시설투자 등)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중소	중견	그 외		중소	중견	그 외	(추가공제한도) 기본공제액의 200%
일반연구개발	25	8~15	2	중소 50, 중견 40, 그 외 20	10	5	1	3
신성장·원천기술	30~40	25~40	20~30		12	6	3	3
국가전략기술	40~50	30~40	30~40		16	8	8	4
중견 적용범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R&D 및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세제지원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
 -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84.6%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으로 제조 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산업경쟁력을 좌우하지만, 현행 중견기업 구간은 매출 규모에 따라 R&D 및 투자 세제지원을 차등

□ 건의내용

-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거나 매출액 2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기업 30%~40%, 코스닥상장 중견 25%~40%, 중견·대기업 20%~30%를 법인세에서 공제('24.12.31까지)

-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R&D 세제지원을 강화

*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추이 : ('19년) 11개 분야, 173개 기술 → ('20년) 12개 분야, 223개 기술 → ('21년) 12개 분야, 235개 기술 → ('22년) 13대 분야, 260개 기술

- 그러나,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만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대다수(92.1%)가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견기업 구간 적용이 어려운 상황

*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수(비중) : 432개사(7.9%)
(통계청,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활용 현황('19년)>

구 분	중소		중견		일반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625억원	11.1%	249억원	4.4%	4,751억원	84.5%
일반 R&D 세액공제	19,971억원	72.4%	2,228억원	8.1%	5,377억원	19.5%

* 기획재정부,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1.9월

-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여부 및 상장시장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려움
- 조세특례제한법 내 세제지원 중 상장 시장을 요건으로 하여 지원을 제한하는 제도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유일
 - * 조특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는 신규 상장 중견기업에 대해 추가로 공제하였으나 상장 시장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지 않았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해 상장 여부에 대한 제한도 삭제된 상황
-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확대하여 제도 활용 실익을 높이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 * 유사입법례 : 중견기업 기술력 향상 및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는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매출 5천억원 미만으로 적용

□ 건의내용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현행) 매출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
 - (건의) 전체 중견기업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당기분)) 중소 25%, 중견(3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 8~15%, 대기업 최대 2%
 - (국가전략기술) 중소 40~50%, 대·중견 30~40%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감소세이나 후발 신흥국과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우주·항공, ICT 등 일부 신산업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 분야별 기술수준('20) :

[한국] 전체 80.1, 우주항공·해양 68.4, 생명·보건의료 77.9, 에너지·자원 80.2, ICT·SW 83.0

[중국] 전체 80.0, 우주항공·해양 81.6, 생명·보건의료 78.0, 에너지·자원 81.6, ICT·SW 85.7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18	'20	'18	'20	'18	'20	'18	'20	'18	'20
기술수준(%)	76.9	80.1	76.0	80.0	87.9	87.3	94.8	95.6	100.0	100.0
기술격차(년)	3.8	3.3	3.8	3.3	1.9	2.0	0.7	0.7	0.0	0.0
기술수준 그룹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추격	선도	선도	최고	최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 기술수준평가, '21.4월

-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80.3%*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 민간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민간기업 중심의 R&D 지원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주요국 연구개발비 중 기업체 연구개발비 비중(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 한국 80.3%, 미국 72.6%, 일본 79.4%, 독일 68.9%, 프랑스 65.4%, 영국 67.6%, 중국 77.4%

- 한편, 중견기업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설비투자과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

* 중견기업 설비투자 / 평균 신규 채용 추이(중견기업 기본통계 각 연도별) : ('17년) 21.9조원 / 63.6명
→ ('19년) 20.8조원 / 30.0명 → ('21년) 22.3조원 / 48.4명 → ('23년 계획) 15.7조원 / 38.0명

<중견기업 R&D 투자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획	2023년 계획
R&D 투자금액(억원)	78,224	77,213	84,443	87,515	91,225

* 중견련, 중견기업 실태조사(각 연도별)

- 그러나,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차에 따라 급격히 축소되어 연구개발 투자 확충이 용이하지 않음

* 중소기업 25% → 중견 1~3년차 15% → 중견 4~5년차 10% → 중견 6년차 이상 8%

- 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의 회귀검토 요인* 1순위는 조세부담이며, 실제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로 중소(13.1%)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17.5%), 상출집단 소속 기업(18.0%) 보다도 높은 수준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 조세혜택 58.0%, 금융지원 15.4%, 판로규제 14.8% 순(중견련, 2021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법인세 실효세율('20년 신고기준) : 전체 17.5%, **상출 18.0%, 중견 18.3%, 중소 13.1%**, 기타 21.1%(국회예산정책처, 2022 조세수첩)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R&D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필요

- R&D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 및 중견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R&D 투자 기반 마련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 5% 상향 시, 매년 8조 8,481억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취업유발인원 및 고용유발인원이 각각 138,187명, 99,322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국재정학회,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9.2월)

□ 건의내용

- 일반 R&D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상향
 - (1안) 기업규모 관계없이 전체 25% 적용
 - (2안) 대 상 : 매출 5천억원 → 2조원 미만으로 확대
공제율 : 대·중견기업 공제율 5%씩 상향
 - * (현행) 중소 25%, 중견 8~15%, 대 2% → (개정안) 중소 25%, 중견 13~20%, 대 7%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 35~45%
 - * (현행) 중소 40~50%, 대·중견 30~40% → (개정안) 중소 40~50%, 중견 35~45%, 대 30~40%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 10%, 중견 5%,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
 - 또한, 신성장기술 및 국가전략 사업화시설의 경우 법인세 공제율을 상향*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중소기업 12%, 중견 6%, 그 외 기업 3%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중소기업 16%, 중견 8%, 그 외 기업 8%
 -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3%(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기본공제의 2배 한도)
- 수요부진, 불확실한 경기전망 등으로 인해 중견·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를 유인할 대책 마련이 시급

<기업 규모별 설비투자 규모 및 증가율 추이>

구 분	금액(조원)			증가율(%)	
	2021	2022	2023(계획)	2022	2023(계획)
대 기 업	174.5	177.3	177.8	1.6	0.3
중견기업	27.0	30.1	28.2	11.7	△6.4
중소기업	11.5	13.5	9.2	17.3	△32.1

* KDB산업은행, 2022년 설비투자계획조사

-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중견·대기업은 세액공제, 중소기업은 정책금융을 가장 선호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시 중견기업의 정책 만족도가 특히 클 것으로 기대

* 기업규모별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KDB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

[대기업] 세액공제 55.8%, 정책금융 29.2%, 규제 완화 15.0% 順

[중견기업] 세액공제 48.4%, 정책금융 39.9%, 규제 완화 11.7% 順

[중소기업] 세액공제 41.9%, 정책금융 44.9%, 규제 완화 13.2% 順

-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개편('20년) 이후 중소·중견기업 공제율 격차가 최대 8%로 증가(개편 전 투자시설별 1~5%) 함에 따라 지원절벽이 심화되어 이를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유도할 필요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 조세혜택 58.0%, 금융지원 15.4%, 판로규제 14.8% 順 (중견련, 2021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건의내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 [일반] (현행) 중소 10%, 중견 5% 그 외 1% → (건의안) 중소 12%, 중견 7% 그 외 3%

[신성장원천기술] (현행) 중소 12% 중견 6% 그 외 3% → (건의안) 중소 18% 중견 10% 그 외 6%

[국가전략기술] (현행) 중소 16% 중견 8% 그 외 8% → (건의안) 중소 25% 중견 15% 그 외 15%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4항

□ 현황 및 문제점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공통 비용이 있는 경우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하여 구분경리
 -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
 - ① 신성장 R&D와 국가전략기술 R&D 공통 시 : 신성장 R&D 비용
 - ② 그 외 경우 : 일반 R&D 비용으로 구분
 - 재료비 등 : 일반, 신성장,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인건비 기준으로 안분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을 병행생산하는 경우 3개 과세연도 동안 국가전략기술(신성장)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누적 생산량의 50%를 초과해야 국가전략기술(신성장)세액공제 적용
- 그러나 전체 R&D 세액공제에서 신성장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46.9%에 달하는 일반기업(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 R&D 비중은 각각 3.0%, 10.1%에 불과

< 기업 규모별 R&D 세액공제 금액 비중(조세특례 심층평가) >



- 중소·중견기업은 연구개발 인력 규모가 작아* 신성장·원천기술 R&D 전담인력 배치가 용이하지 않으며 공통비용 발생이 불가피해 인건비에 대한 R&D 세액공제 안분이 필요

* 중견기업 평균 R&D인력(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 11.0명(전체 인력의 4.3%)

- 특히 중견기업은 신성장-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공제금액**이 타 기업군에 비해 미미한 수준

* 중소기업 일반 R&D / 신성장 R&D 세액공제율/공제율 격차 : 25% / 30% / 5%

중견기업 일반 R&D / 신성장 R&D 세액공제율/공제율 격차 : 8% / 20% / 12%

** 기업규모별 신성장, R&D세액공제 금액 : 중소 625억원, 중견 249억원, 일반 4,751억원

- 또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상용화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R&D 착수단계인 중소·중견기업이 병행생산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 국가전략기술 생산제품이 3개 과세연도 누적 생산량의 50%를 초과할 것

- 중소·중견기업이 폭넓게 제도를 활용하여 신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적용방식을 개선할 필요

□ 건의내용

- 공통 인건비도 재료비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분
- 병행생산 시설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사후관리요건 완화
 - (현행) 총 생산량 대비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비중 50% 이상 ⇒ (건의안) ① 대기업 50% 이상, 중소·중견기업 30% 이상
 - ② 중소·중견기업 일반 국가전략기술 생산 비중으로 안분하여 공제
 - * (예시)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제품 90%,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제품 10% 생산 시 90%는 일반투자세액공제, 10%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한 2030 NDC 상향('18년 대비 26.3%→40%)으로 인한 부담 증가로 우리 산업 및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우려

- 특히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상 산업부문의 감축목표 상향(기존 6.4%→14.5%)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경제에 악영향 초래 우려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 : 한국 26.1, 일본 19.5, 독일 17.0, 유럽 14.0, 미국 10.6

○ 탄소감축 관련 기술수준도 선진국 대비 취약해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2030 NDC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의 탄소감축 및 에너지 관련 기술수준은 주요국 대비 부족하며, 최고기술 수준 국가와 비교해 1~5년의 기술격차 존재

<주요국의 에너지·자원분야 기술수준 비교(2020)>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탄소저장·포집·이용	80(5년)	100	95	90	82.5
수소·연료전지	75(3년)	93	95	100	70
고효율 태양전지	90(1년)	93	100	97.5	87.5
풍력발전	75(5년)	90	100	76.5	80
바이오 및 폐자원 에너지화	78(4년)	100	100	85	75

* ()은 최고기술 국가와 격차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기준 기술수준평가, '21.3월

○ 산업계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가 불투명한 상황

○ 탄소중립 목표는 산업계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R&D·금융·세제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 필요

- 특히, 대기업에 비해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탄소감축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 생산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R&D 개발 등에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므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

□ 건의내용

- 탄소중립 R&D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국가전략기술(현재 신성장·원천기술)로 포함해 세제지원 확대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탄소중립 관련 R&D 지원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투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산업 현실을 감안한 NDC 목표 조정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 촉진을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설투자 등에 대해 세제지원
 - (기금출연) 기업이 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을 목적으로 보증기금에 출연하거나 중소기업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25.12.31까지)
 - (무상임대)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위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자산 장부가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25.12.31까지)
 - (시설투자) 기업이 수탁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 7%, 중견 3%,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25.12.31까지)
- *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중소기업만 해당
- 정부는 대기업을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조특법 제8조의3),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과 기금을 조성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
 - * 관계부처합동, 2020년 경제정책방향, '19.12월
- 그러나,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는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상생협력법에 따른 중소기업만을 수탁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어 대·중견기업간 상생협력 활동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됨

- 수위탁 거래에서 1차 협력사 비중이 높은 중견기업은 대-중견-중소 기업 거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은 중간자인 중견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 중견기업의 51.1%는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으며, 수·위탁 거래 중견기업의 48.5%는 1차 협력사 임 (중견련, 2021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또한 수탁 중소기업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위탁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수탁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의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

* 중소 7%, 중견 3%, 그 외 기업 1%

- 수·위탁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위탁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동반성장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위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

□ 건의내용

- (시설투자) 수탁기업 시설투자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중소 7%, 중견 3%, 그 외 기업 1% ⇒ (건의) 모든 기업 7%
- (기금출연)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모든 기업 10% ⇒ (건의) 모든 기업 20%
- 상생협력 지원대상 기업을 중소기업(협력중소기업, 수탁기업 등)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99년 지주회사제도 허용 이후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다양한 세제 혜택 부여 등 지주회사 전환 촉진정책을 추진해 옴
- 그 일환으로 지주회사 전환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세제 혜택이 지배주주에게만 집중된다는 이유로 과세특례 제도를 '21년 말 폐지할 예정이었으며 코로나 19를 이유로 '23년 말까지 추가 연장
 -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 등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23년말까지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24년부터 '26년말까지 출자로 취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양도일로부터 4년 거치 후 3년 분할과세
- 과세특례 폐지는 그 간 추진해 온 지주회사 전환 촉진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정책 비일관성 초래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어렵게 하여 기업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선을 저해할 우려
 -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지주회사는 행위제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여 보유해야 함
 -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50% 이상
 - 자회사 주주는 지주회사에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자회사 주주가 보유 중이던 자회사 주식의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세문제 발생

- 미실현 이득에 과세할 경우 세금부담으로 인해 현물출자를 기피하게 되고, 지주회사는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요건을 충족해야 해 자금부담이 증가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어렵게 할 것
- 중견기업은 경영안정성 확보 및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이나, 고물가·고금리·글로벌 긴축정책 등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지주회사 전환을 미루거나 중단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제조 A사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으로 자본확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 차입의 경우 부채비율 증가로 인한 재무건정성 문제가 있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해 경영권 위협에 노출 우려 증가. ○ 최근 안정적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이나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중단 및 지주회사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건의내용

- 지배구조 개선 및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또는 과세특례 일몰 기간 추가 연장

□ 관련법령

- 관세법 제95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 및 중견 제조업체가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일부를 감면(중소 70%, 중견 50%, '23.12.31까지)
- 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이 한시 확대*되어 중견기업이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올해 이후 중견기업 지원은 일몰될 예정

* 중소 50%, 중견 30% → 중소 70%, 중견 50%(관계부처 합동, 2021년 경제정책방향)

** '21년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37개 물품 신청

- 해당 제도 이용기업 다수는 일본·대만 등 FTA 미체결국가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있어 관세혜택이 없기 때문에 정책만족도가 높은 상황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타 지원정책에 비해 세수부담이 적고*, 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일몰연장시 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이 예상됨

* '17년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실적(한국기계산업진흥회) : 61억원(중견기업 약 11.2억원)
기타 주요 시설투자 세액공제 규모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116억원, 환경보전시설 500억원,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74억원, 생산성향상시설 5조3786억원 등

- 신청기업 대다수는 로봇, 제약 등 신산업을 영위하여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 제품 수입이 불가피하며, 타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기존 시설과의 규격화 비용 발생 및 품질 저하를 우려

사례

- B사는 엔드밀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스위스, 독일, 미국 등 세 국가에서만 생산되던 제품을 국산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현재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창출
- 매년 10여개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을 신청하여 감면 받고 있으며, 감면대상물품은 주로 일본 및 대만에서 수입
- 100분의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절삭공구 시장은 높은 정밀도와 균일한 생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공장라인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품질저하 우려가 있어 위험부담이 큰 상황임

- 공장자동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증대를 통한 법인세수 확대에 기여

□ 건의내용

-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 (현행) 중소 70%, 중견 50%, '23.12.31까지 ⇒
 - (건의) 감면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25.12.31까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 현황 및 문제점

-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청년 취업자는 5년간 90%)('23.12.31까지,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새 정부는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는 역행적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중견기업법을 상시화하는 등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여 혁신생태계를 복원하는 정책 과제를 발표

*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17번, '22.5월)

- 조세특례제한법 내 대다수의 고용 관련 세제지원의 역진적 구조는 고용 창출 여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규모만으로 지원을 축소하여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늦출 우려

-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부 제도는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지원이 단절

* 중소→중견 성장시 배제되는 고용 관련 세제지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나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졸초임의 66.3%^{*}에 불과하여 구인이 어려운 상황

* [대기업 대졸초임] 5,084만원(경총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21.10월)
[초기 중견기업 대졸초임] 3,372만원(중견련,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데이터를 가공)

- 실제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규채용 애로사항 및 이직 원인으로 낮은 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 * 중견기업 신규채용 애로사항 2순위 :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16.4%),
중견기업 근로자 이직원인 1순위 : 낮은 임금수준(18.1%)
- 또한, 구직자의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은 타 기업군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아 인재영입 애로가 가중될 우려
 - * 기업규모별 제조기업 비중 :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35.8%, 대기업 16.9%(통계청, 2020 중견기업기본통계, 2020 중소기업기본통계 재가공)
- 구직자의 중견기업 취업을 유인하여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

□ 건의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및 일몰연장

Ⅱ. 기업승계제도 개선

1

상속세율 인하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세계 2위(OECD 평균 15%)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세율	국가	세율	국가	세율	국가
55%	일본	30%	벨기에, 독일	10%	아이슬란드, 터키
50%	한국	25%	칠레	7%	폴란드, 스위스(칸톤 레벨)
45%	프랑스	20%	그리스, 네덜란드	4%	이탈리아
40%	영국, 미국	19%	핀란드	0%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34%	스페인	15%	덴마크		
33%	아일랜드	14%	슬로베니아		

*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1

-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승계보다 매각을 고려
 -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1년 상속세수는 6조 9,447억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452% 증가했으며, 전체 세수 대비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
- * 상속세액 및 세수 비중(억원, %): ('11) 12,586, 0.7 → ('16) 19,949, 0.9 → ('21) 69,447, 1.9

-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

<OECD 회원국 상속세 비교>

상속세 유지 국가(23개국)	상속세 폐지 국가(15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취득세(19) :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 유산세(4) : 덴마크, 대한민국, 영국, 미국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비과세) 슬로베니아 (배우자 및 직계가족 비과세)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이득세(4)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 추가소득세(3) :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 비과세(7) :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 인지세(1) : 포르투갈(직계가족 면제)

* 국회입법조사처,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1.10.1

□ 건의내용

- 직계가족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OECD 평균 15%) 또는 자본이득세 도입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20%를 할증평가(단, 중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제외)하여 상속세 부과
 - * (시행령 개정안)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 실효세율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고려할 경우 최고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
 - *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 할증평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기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
- 할증평가로 인해 상속받은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의 최대 60%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상황에서는 기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어려움
 - * 기업승계시 애로사항 :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 68.8%, 복잡한 지분구조 11.1%, 엄격한 기업승계 요건 7.2%순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 특히, 상장기업은 평가기준일*에 비해 실제 주가가 낮아진 경우에도 평가액만큼의 주식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승계 후 최대주주의 지분을 하락으로 경영권 위협의 우려가 존재
 - *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의 시가(時價)에 따름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 건의내용

-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또는 전체 중견기업 제외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현황 및 문제점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함
 - *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대분류 21개 중 16개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
-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기업승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등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
-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업종 자체가 한정되어 있어 일정 기간 이상 가업을 영위해왔음에도 기업승계 시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전통산업은 전체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한정된 업종만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

<제조업-서비스업 관련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예시>

표준산업분류(대분류 기준)	가업 해당 업종
광 업(05~08)	광 업 전체
제조업(10~33)	제조업 전체 (단, 직접생산제품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해 세부요건 충족 필요)
건설업(41~42)	건설업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연구개발업(70),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등 5개 업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75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등 7개 업종
교육서비스업(85)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등 4개 업종

- 특히, 서비스업은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표준산업분류 코드 또는 개별법률 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인정 여부가 달라져 타당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사례	
○ C사는 인력도급 관련 사업을 40년 이상 영위하며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타사업체와의 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통해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라인 등을 운영관리하고 있음(표준산업분류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에 해당)	
○ 그러나 주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단,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고용알선업(75110)" 등 일부 부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으로, 유사·동종사업("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751)"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에 어긋남	
○ 리조트에 속해있는 골프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가업에 해당하지만, 일반 골프장의 관광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세제·금융·재정 등 지원 제도의 차별을 해소하고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가업을 폭넓게 정의할 필요
 -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120대 국정과제, '22.7월)
-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백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건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전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제외 업종*만 별도 규정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현황 및 문제점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3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에 대해 기업승계 시 최대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
 -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은 국내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봉착, 해외 신시장 개척 등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한 상황
 -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중견기업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 및 대를 이은 장기 성장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
- 그러나, 과도한 상속세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상황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 비교>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평균
한국	가업상속 공제 건수(개)	46	58	70	68	67	76	91	103	88	74
	가업상속 공제금액(억원)	325	343	933	986	1,708	3,184	2,226	2,344	2,363	1,601
독일	가업상속 공제 건수(개)	5,123	6,124	8,061	10,141	11,085	11,885	10,747	10,311	11,368	9,427
	가업상속 공제금액(백만유로)	4,412	3,733	3,713	6,439	4,753	5,208	6,881	4,029	3,047	4,691
영국	2011-2018년 평균 2,620건, 1,801백만파운드										

* 코스닥협회,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세제」, '21.5월

- 특히,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이 지속 경영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

- 기업규모가 클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중견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육성할 경우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기업당 216명을 고용하는데 반해 매출액 5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기업당 1,096명을 고용(중견기업 통계, '21년도 결산기준)

- 해외 주요국들은 직계비속이 기업을 승계할 경우 공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거나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

<주요국의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 혜택>

국가명	직계비속 명목 최고세율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공제혜택	실제 부담 최고 세율
스페인	34%	가족소유 기업인 경우 주식가치의 95% 공제 (17개 지방정부 중 6개는 상속세 면제)	1.7%
벨기에	30%	일정 지분, 자본금 유지 등 기업승계요건 충족 시 낮은 세율 적용	3.0%
아일랜드	33%	주식가치의 90% 공제	3.3%
네덜란드	20%	상속 후 5년 이상 경영 등 법적요건 충족 시 83%(107만 유로 초과)~100%(107만 유로 이하) 공제	3.4%
독일	30%	지분 및 임금지급 유지 시 85~100% 공제	4.5%
프랑스	45%	환매 금지 조건부 지분 75%까지 공제	11.3%
영국	40%	상장주식 50%, 비상장주식 100% 공제	20.0%

* EY한영,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8

□ 건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전체 중견기업) 및 공제 한도(최대 6백억원 → 최대 1천억원) 확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8조

□ 현황 및 문제점

- 금전, 유가증권, 토지 등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나, 비상장주식은 담보에서 제외되어 비상장사는 연부연납 제도 활용에 애로

*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 비상장 중견기업(83.1%)*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 마련을 위해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게 되어 경영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

* 중견기업 현황('21년 결산기준) : **비상장 4,555개(83.1%)**, 코스피 453개(8.3%), 코스닥 467개(8.5%), 코넥스 5개(0.1%)

- 비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면서 납세담보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부담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조세 정책의 일관성 결여

-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가능한 것에 착안하여 환가성에 대한 평가 및 신뢰가 있는 기업에 대해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획재정위원회 송병철 전문위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홍석준의원안, 의안번호 제2104118호)

□ 건의내용

- 기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로 증여세 과세가액(최대 600억원)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율 10%(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 20%)를 적용하고 한도 초과액은 누진세율(10%~50%) 적용

* 기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연부연납제도* 운영 중이나 증여시 연부연납기간이 5년에 불과해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에 애로 발생

* (상속) : 상속재산 중 기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50% 이상: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증여) : 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중견기업은 과세특례 한도 확대에도 증여세 부담액이 커 5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우며, 증여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매각해야 하고 이로 인한 지분을 하락으로 경영권 위협에 노출 우려

(예) 1천억원을 증여받은 중견기업의 경우

○ 증여세 부담 세액 : 307.4억원

* 특례한도(600억원) 세액: 6억원(60억원 이하 10%) + 106억원(60억원 초과분 20%)

특례 한도 초과분(400억원) 세액: 195.4억원(10~50% 누진세율)

○ 5년 간 연부연납시 매년 61.5억원 납부(거치기간 없음)

* 편의상 특례한도를 최대로 적용하여 계산

□ 건의내용

- 안정적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과 동일한 수준(최대 20년)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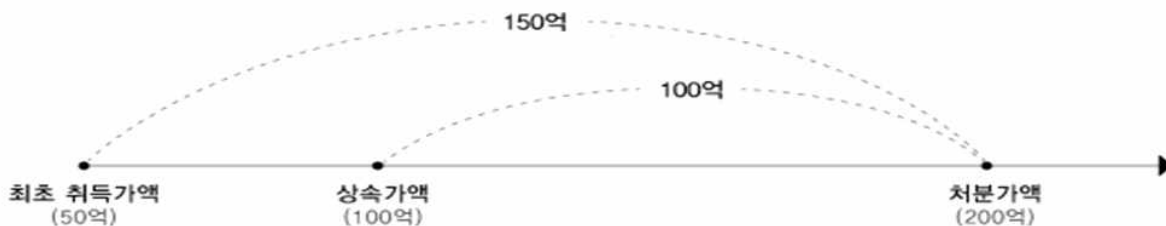
□ 현황 및 문제점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산정 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받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을 적용

* 취득가액 = { 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 { ②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는 경우 상속시점에 이연받은 상속세에 대해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아닌 과세이연 효과에 불과

- 창업주가 50억원의 자본으로 기업을 발전시켜 100억원을 가업상속하고 상속인이 사업을 15년간 영위한 후 200억원에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은 100억원(처분가액 200억원 - 상속취득가액 100억원)이 아닌 150억원(처분가액 200억원 - 최초취득가액 50억원)으로 산정됨



□ 건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자산양도 시 취득시점을 상속받은 시점으로 판단